

종합결과보고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종합결과보고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9개 국책연구기관과 5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과제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 1	
과제2.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7
과제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 중국 ·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11
과제4.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와 관리	17
과제5.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25
과제6.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31
과제7.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37
과제8.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43
과제9.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47
과제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53
과제1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59
과제12.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63
과제1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69
과제14.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 · 협력의 실태	75
과제15.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잠재력과 장애요인	81

인문사회연구회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에서 1차년도인 2004년에는 현실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러한 1차적 작업은 2차년도에 들어서 각국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로 연결될 것이며 3차년도에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구체적 제안과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2004년의 1차년도 과제는 총 15개를 선정하였다. 그것은 동북아시아 공동체 및 문화공동체의 철학적 개념과 실천 가능성을 동북아시아 지역과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맥락에서 각각 살피는 작업과 유럽공동체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방향 설정을 시도하는 과제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의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제안을 찾아보는 작업으로 뒷받침 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구는 충실한 내용을 담아내었으나 간혹 주제를 너무 협의로 설정하거나 현실에 대한 분석을 결여한 것도 있었으며 구체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이며 현실보다는 이상을 전개하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 명 석 (서울대 교수)

한 경 구 (국민대 교수)

장 수 현 (광운대 교수)

최 호 림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동북아라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우며 모호하다. 일본에서의 동북아 논의는 해양을 통한 연계를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대륙 아시아를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동북아라는 인식 자체가 매우 희박하다. 또한 동북아와 동아시아 개념의 설정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또한 문화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서로를 ‘우리’로 인식함으로써 강렬한 정서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일진대, 과연 한·중·일 3국 각각이 그렇게 서로를 동질적인 문화적 색채를 띤 것으로 인식하는지는 불투명하다. 한자와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문화통합을 이룰 만큼 일상적 생활 속까지 깊숙하게 침투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대중문화와 소비문화를 통한 탐색은 그 성격상 서구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이질적인 문화 요소가 혼재한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개념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한·중·일 3국이 유사한 전통문화를 공유할 것으로 보는 신화를 해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보다 생산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분석을 시도한다. 첫째, 한·중·일 삼국에서 각각 동아시아 담론이 어떻게 전개되며 그 속에서 상호인식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둘째,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과 이질성을 유교사상과 관련하여 문화적 특질을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현대적 조직문화에서 어떻게 상이한 점이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동북아문화공동체 개념이 지니는 동북아 중심주의적 관점과 폐쇄성 등을 탈피하는 동북아 문화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동아시아 담론 및 한·중·일 삼국의 상호인식의 현황

일본에서는 몇 차례의 동아시아의 공동체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19세기 말의 아시아 연대론은 서구의 위협 앞에서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었으나 실상은 일본의 당면한 위기의 극복과 그 세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려는 수단의 일환이었음이 드러났다. 1930년대에는 서양화의 모

순과 서양으로부터의 고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려는 수단으로서 공동체론이 다시 등장하였다. 1940년대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구상하여 그 실현을 정치 슬로건화로서 내외에 주창했던 일본의 주도에 의한 동아시아 신 질서를 의미하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개념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는 장래의 목표로서 극동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후 편협한 내셔널리즘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도 ‘신판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의구심을 사는 행동들이 일부 보수적 인사들에게서 관측되고 있다. 아무튼 일본의 공동체 담론은 국내외의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의 수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혹은 냉전 이후 일본 주변사태의 안보적 위협에 대처하는 일환으로 일본은 소극적인 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국제적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모색하고 있다. 경제적인 관심사로 인한 동북아공동체의 모색은 모리시마의 ‘동북아시아 공동체’ 개념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일본, 중국, 한반도, 대만, 오키나와가 먼저 ‘건설 공동체’를 이룩한 후 시장 공동체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방안으로서, 버블경제 이후 일본의 몰락을 저지하는 유효한 타개책이라고 한다. 한편 와다 하루키는 다분히 개혁적 유토피아주의의 입장으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주창하였는데, 동북아시아가 비록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연결고리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 노력을 본격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미국까지 포함하여 전략적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먼저 평화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통해 환경, 경제,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아가 정치 및 안보 공동체를 수립한다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반도를 그 중심에 놓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많은 재일한국인들은 그들과 같은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그들을 통해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중국에서는 중국 중심주의적인 화이론이 우세해 왔다. 량치차오는 서구 열강을 견제하는 데 우수한 황인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종주의적 견해를 내세웠으며, 쑨원은 서양의 강력한 힘에 저항하기 위해 국가 단위를

초월한 연대를 모색한 ‘대아시아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대의 중국에서는 진정한 동아시아론은 아직 출현하지 않은 듯하다. 물론 개혁개방 이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남한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가 아직도 국가 간 교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이라는 역사문제가 서로를 바라보는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동의 문화적 정체성 및 연대의 구축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즉 핵심은 국가 간의 관계를 중시하여 서로간의 심리적 거리가 좁혀진 다음에야 공동체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참여정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의 구상과 함께 ‘동북아 공동체’ 논의가 범람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당위성이 학계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중심’으로 무언가를 해 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의 확충이 큰 역할을 담당한 듯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아론은 여전히 이성에 기반한 서구 근대의 합리성과 과학주의, 그리고 감성에 기반한 비서구의 비합리성과 문화주의라는 서구 근대가 세계를 규정하는 인식론 위에 구축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상에서 ‘동아시아성’을 주체화(self-orientalism)하는 경향이 뚜렷이 감지된다고 하는 서구중심주의적 사고와 타자화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제기된다. 다른 비판으로는, ‘문화’ 및 ‘문화적 동질성’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문화공동체’가 동아시아 특유의 문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동아시아의 문화적 실체와 본질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상상적 담론의 수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정체성, 혹은 지역권이라는 개념을 비판하면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연구는 상황적이고 역사적이어야 하며, 담론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문화에 천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주의, 중심주의적 지향을 재고하는 의미에서 ‘주변의 입장에서 동아시아를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어서 동아시아 내의 다양한 연대를, 차이를 인정하는 성찰적 입장을 강조한다.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과 이질성

동아시아 3국의 사회관계의 유형 및 문화적 성격에서 서구사회와 구분되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직의 기본 유형이나 원리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주요한 것들로는 가족과 친족의 구성원리, 유교사상과 그 실천, 조직문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가족의 구성원리로는 한국은 부계혈통에 의거한 장남상속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중국은 부계친족에 입각한 종족 개념을 강조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가업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가장권의 계승이 우선시된다. 친족집단의 조직원리에서도, 중국은 부계 혈연관계가 중요하며 그 공간적 범위도 일본에 비해 훨씬 넓은 편이다. 한국도 중국과 유사한 편이나 조상의 사회적 지위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중국과 달리 중앙정부에 대한 충성이 중요시되었다. 유교의 영향력 또한 동아시아 3국에서 강조할 수 있으나 각기 해석을 달리하여 실천적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인 중심의 중국 유교와 달리 일본 유교는 인에 대한 경시와 충의 중시로 인해, 자기 한 몸을 희생하여서까지 군주에 봉사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조상숭배와 관련하여 주자학보다 불교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지나치게 물질 지향적이며 상업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유교자본주의에 대한 설명도 지금까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단순화한 설명을 적용하고 있었다. 각 국가는 현대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교 이데올로기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감지된다.

현대적 조직문화에서도 3국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기업집단은 '위계적' 혹은 '가산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일본은 하나의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기업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보완적이어서, '공생적' 혹은 '공동체적' 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타이완 기업집단은 수많은 독립기업들이 가족관계와 같은 연결망 속에서 거래를 하여, '군생적' 혹은 '가족 연결망적' 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각국의 가족제도의 차이에 영향 받은 것으로 인식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라는 개념은 동북아라는 지리적 경계 내에 문화적 동질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공통되는 기본적 문화요소는 전통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이 기존의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논의에 깔려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것은 동북아 문화공동체란 개념을 대체해서 ‘동북아 문화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일종의 ‘다문화주의적 공동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문화요소를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에 의해서 문화공동체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개별 주체들이 모두 동일한 연결망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또한 외부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는 열린 공간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 무리하게 하나의 동심원을 구축하기보다는 다원적 동심원에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공동의 관심을 기울이지는 수준의 정책 제안이 보다 수용성이 높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문화네트워크는 어떤 본질적인 문화적 동질성과 고유성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한·중·일 3국간의 문화적 차이가 단지 다르다는 인식을 넘어서서 서로 충돌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는 현실 상황에서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키우는 문화교류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동북아 시대를 강조함으로써 협소한 지역 의식으로의 회귀라는 느낌을 벗어던지고, 단절보다는 연결의 측면을 부각시켜 세계로의 시선이동과도 부합할 수 있다.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 명 섭 (연세대 교수)

이 연 호 (연세대 교수)

이 동 윤 (서강대 동아연구소 상임연구원)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동체 구성의 구체적인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역내 주요 국가들 사이의 정치·안보적 이견이 크고, 그밖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요인들이 경제협력이나 지역공동체 구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강국으로서 중국과 일본이 서로 화합을 이루지 못한 채 역내 국가간 정치·문화적 동질성을 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근래의 동북아 공동체 구성에 관한 논의도 자칫 역내 국가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동북아 공동체 실현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혹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이나 경제협력체 구성이 만능인 양 인식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화통합 및 공동체 형성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유럽 문화공동체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교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여 동북아 공동체 구성에의 문화적 접근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역사·문화적 인식과 문화공동체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봄, 나아가 유럽과의 비교를 통해 공통성과 차별성을 인식하여 유럽의 경험이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갖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검토하여 동북아 문화공동체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럽 국가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방법과 노력은 단지 협의적 차원의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훈련, 청소년 교류 등 매우 광의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전개되었다. 당초 유럽공동체 형성의 주요 목표는 정치·경제적 통합이었으나, 그 실질적인 통합과정이 진행되면서부터 문화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유럽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유럽 시민으로서의 기본 의식과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활성화하여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들도 함께 추진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정치·경제적 통합의 부수적 산물로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다른 부문과 영역들의 통합을 선도하고 통합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반면 동북아 지역에서는 그 중심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등은 저마다 동북아 공동체 구성의 중요성과 그 실질적 이익을 인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군사·안보적 불신과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상호 인식의 부족 등으로 동북아 공동체 구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각국은 사실상 역사적 문화유산에 기인하여 자신들 나름대로의 상호 다른 인식체계를 형성하여 왔다. 근대 일본은 동북아 지역은 ‘탈중국’을 위한 ‘서구화’와 ‘대동아’라는 포괄적 범주 속에서 개념화되었으며, 중국은 ‘중화주의’라는 전통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동북아를 동아시아 범주에 포함시켜 왔다. 중국적 표준화가 깊이 내재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 또한 외세의 침입에 대응하는 자구책과 생존의 논리로서 ‘사대’와 ‘선린’이 근대화의 격동기를 헤쳐 나가는 전통적 지역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각국이 서로 다른 인식체계를 가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동북아 지역화와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첫째,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는 아직도 군사·안보적 불신과 경쟁이 팽배하여 정치적 요인이 지역협력과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둘째, 각국 사이의 경제적 경쟁관계와 입장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탈냉전 이후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넷째,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지역적 개념과 범주, 그리고 과거 역사와 문화적 유산에 기인하는 인식론적 차이 또한 동북아 공동체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족이라는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이를 보편적 맥락에서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민족이나 국가 기획을 넘어서 지역을 단위로 한 인식의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유사성과 동질성을 넓혀 나가는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동북아 공동체에의 문화적 접근 방법이 한국에게 많은 강점이 있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지 지리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한국은 중국에 2백만 명, 일본에 1백만 명 등 일본, 중국과 달리 동북아 공동체 역내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고른 해외동포를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다각적인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한국이 중심이 된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류열풍 또한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능가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러한 강점을 살려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교류 사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동북아의 공동체 추진 양상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에 주목해보면, 유럽 국가들이 과거 역사와 문화유산에 기인하여 비교적 동질적인 정체성과 표준을 확립하고 상호 협력적인 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던 것에 반하여, 동북아 국가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미약하고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정치·경제적 통합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적 교류와 협력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나, 동북아 국가들은 아직도 정치·경제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미진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역협력과 통합의 원동력을 제공해 줄 지역정체성과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조차 공동으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동북아의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성을 위해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거 분절적 역사와 문화유산을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공동체 구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접근방법의 노력들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과거 역사와 문화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공동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상호 이해의 증진이 강화되어야 한다. 유럽연합과 같이 포괄적·체계적인 계획이나 거대한 프로그램의 공동 추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교류와 협력의 공동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 · 중국 · 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 영 균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문 옥 표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송 도 영 (서울시립대 교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각국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경제적 이익의 확보를 우선하는 입장을 가진다는 점과 실제로 국력과 경제구조 그리고 정치체제가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 공동체나 경제적 공동체보다는 문화적 공동체의 형성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훨씬 실현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향후 정치적 공동체나 경제적 공동체도 문화적 공동체의 바탕이 존재할 때 비로소 가능해 질 것이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대중문화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동북아 삼국 간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교류는 단연 대중문화의 교류일 것이다. 그런데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대중문화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중문화는 그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즉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상품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교류와 확산은 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매우 예민한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각국의 대중문화가 생산·유통·소비되는 양상을 파악한 후 대중문화산업분야가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영역 - 영화, TV방송, 그리고 유행음악을 중심으로 한 음반 - 만을 다룬다. 단, 현 단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문화현황의 파악에 주력하고 있고, 삼국 간에 교류되고 있는 대중문화의 내용에 대한 파악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중국 대중문화산업의 현황

중국의 영화 산업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최근 정부 주도의 개혁을 통해 생산, 유통, 소비의 영역에서 다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며 변화에 수반되어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영화 산업계의 불균형적 발전, 불법 복제 상품의 범람 등, 각종 문제들과 함께 중국 영화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엄청난 규모와 국가의 강력한 통제일 것이다. 거대한 규모는 성장 잠재력의 원천이 되지만 콘텐츠의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콘텐츠의 부족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로 인한 창의성과 창작 의욕의 위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는 더욱 신속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담보로 하는 TV방송의 디지털화의 순조로운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외국 텔레비전 방송업체의 진출과 합작 강화가 증대되고 있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합작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는 제작 및 발행을 담당하는 단위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통제도 매우 엄격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한다.

불법 복제품의 범람으로 중국의 음반영상사업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간섭도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유통단위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또한 유통부문의 개선이 일조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기업과의 합작도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일본 대중문화산업의 현황

현재 일본 영화산업에서는 제작영역을 구성하는 주체들을 ‘大手 영화회사’(메이저 영화회사)와 ‘독립계 프로덕션’(독립프로덕션)이라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이분하여 부른다. 이러한 분류는 다른 분야나 영역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상투화된 인식의 틀이다. 그리고 판권을 가진 측과 제작을 담당하는 측이 구분되며, 실제 제작자가 출자해서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방화(邦畫)라 하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영화는 양화(洋畫)라고 부르는 것이 상투화되어 있다. 영화의 배급주체도 이 구별을 따라 나뉜다. 영화시장의 규모는 흥행수익이 지표가 된다. 흥행수입은 조금씩 늘어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TV방송산업에서는 민간의 방송국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아주 드물며, 실제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공급하는 기업체는 제작프로

덕션이다. 이런 제작프로덕션들은 하나같이 획일적이기는 커녕 나름대로 역사적인 경위나 특징 등을 갖고 있다.

TV산업의 특징으로는 방화·양화 구분이 없다는 점, 국내 제작된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음반의 시장은 수적으로 그리고 종류에 있어서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더 확대시켜 본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음반들이 분화된 소비자층 사이에서 향유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 대중문화산업의 현황

한국의 영화산업은 지상과 방송이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25% 이상을 한국영화로 편성하도록 규정한 스크린 쿼터제가 주요 특징이다. 스크린 쿼터제는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폐지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 실효성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997년 이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제작시스템을 갖춘 프로덕션들이 형성되고 국제적인 투자조합들이 결성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산업계는 방송 3사가 차지하는 매출액이 방송산업계 전체 매출액의 67.5%를 차지함으로써 절대적인 위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제 문화산업 시장의 동향은 급변을 거듭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수출이 왕성한 편이지만 장기적인 트렌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음악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반산업은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나라별 산업환경에 따라 양태를 달리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문화산업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국 음반산업은 1990년대에는 급성장을 통해 연간 매출액 4,0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시장교란과 경제위기로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이후 2000년 잠시 회복되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 음반시장 전체의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특히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한국의 매체환경 속에서 신규매체의 등장으로 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중이다.

전체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 문화산업에도 상당한 문제들이 있는데,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일부 산업분야에 뿌리 깊게 잔존하는 비합리적 관습, 미흡한 지적 재산권 보호, 문화산업 관련 수치의 불투명성, 다수 문화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국제적 활동 능력과 경쟁력의 미약함 등이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의 생산적인 측면에 대한 현황분석에 치중하였으며 한류의 시대적·지역적 그리고 세대적 추이와 한국에서의 중국 및 일본의 대중문화 소비 형태에 대한 연구는 2차년도에 각국의 문화정책의 맥락과 함께 조사를 할 것이다. 문화의 소비는 단순히 소비자가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유통 구조와 정책의 차원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와 관리

박 경 하 (중앙대 교수)

홍 윤 기 (동국대 교수)

김 유 환 (이화여대 교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 중, 일의 동북아 지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되었다. 삼국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포스트임페리얼리즘적 특성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은 이 지역의 각 국민국가가 바로 그 국민국가 단위에서 정치적으로는 승리주의, 경제적으로는 성장주의를 체질로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적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간 지역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정치·경제면에서 국민국가로서 초기국면 이상의 발전을 요구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경제 및 정치 측면의 이해관계에서 이들 국가들을 사안별로 어느 정도 결합시켰던 쌍무적 협력관계들만으로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는 국가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곧 이들 국가들이 자기 국가를 무엇으로 이해하여 대외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어디에다 자기 입지를 요구하느냐 하는 문제, 즉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의 문제였다.

정체성의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사 문제로, 역사 교육은 현대 국민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분화를 국민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므로 국가를 주도하는 세력은 정치권력의 안정화를 위해 그 권력의 성격에 부응하는 정신태도를 국민들에게 내면화시키려고 한다. 일본의 역사교육은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 전쟁의 피해자였던 이웃 나라들의 강력한 항의로 야기되는 주기적 역사파동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교직원조합과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교과서의 채택을 억제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본 안에서의 정체성 정치는 압도적 정치세력의 지원을 받아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상황에서 대국을 지향하는 우익적 자기정체성 입장을 일관되게 확대시키는 쪽이 일본 민족을 강조하면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가운데 탈정체성의 초국적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세력이 그 헤게모니에 급진적 비판을 행하는 형세로 진행된다. 한국의 정체성 정치가 국가적으로 행해진 것은 박정희 시대로, 국민교육현장의 제정으

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독재를 정당화하고 반공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1987년 6월항쟁, IMF사태를 거치면서 21세기 초엽의 대한민국국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체성의 정치를 펼칠 건전한 정치세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주의적 정체성과 민주주의적 정체성이 부정형적으로 교착하는 아주 혼돈스러운 국면에 있다. 이에 비하면 후진타오 집권으로 가속화된 중국의 정체성 정치는 국민국가가 자기의 세력범위 안에서 가동시킬 수 있는 국가장치를 총동원하여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체성의 정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의 다양한 민족의 일체화 정책, 통일적 다민족국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안문제의 은폐로 말미암아 원심력적 분열의 잠재력을 안고 있다.

각국의 정체성 정치들 사이의 현재적 관계는 냉소적 무관심 속에서의 긴장된 공존 상태라는 점이다. 문제는 세 나라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경제적 공동체의 조건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 나라의 정체성 정치가 다른 나라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 나라의 내적 필요에 의해서만 정체성 형성 작업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의 반복은 세 나라 국민들 사이의 심층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동북아 문화유산의 공동연구와 관리를 통해 긴 문명의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적 풍요의 교류를 통한 학습가능성과 평화로운 공존 방식의 의식적 추구를 통해 평화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첫번째 필요성은 바로 이 서로의 삶의 양식과 그 역사적 삶의 과정이 지니는 문화적 학습 가치에서 찾아진다. 그리고 서로의 역사와 영토 안에서 국민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에 서로의 삶이 영겨 독특한 문화물이 창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삼국이 과거 한번도 서로에게 폐쇄적으로 고립되어 지낸 적이 없다는 점을 서로의 대중에게 좀더 체계적으로 인식시키고 교육시켜 삼국의 국민이 서로의 발전의 긍정적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납득시켜야 한다. 이렇게 교류의 역사적 지속과 각 문화발전예의 긍정적 기여의 확인 필요성이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조성

할 두번째 필요성이 된다. 나아가 혼자 폐쇄적으로 살기보다는 삶의 현상이 타국으로까지 확장되고 개방되어 자기 삶의 가능성을 보다 풍부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평화로운 상생의 질서를 창출하여 공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자는 것이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의 세번째 필요성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개념의 국민국가적 계박성과 인류적 개방성을 지향하기 위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문화재란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확고한 정신적 가치를 지니는 것임과 동시에 문화적으로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삼국이 공동의 생존에 대한 현재적 필요성에서 기왕의 차이 낳던 문화적 개성들을 공존할 생활세계권역 안에서 창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그 생활세계권에서 이루어질 삶이 보다 풍요롭고 다양하게 실현되도록 만듦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이 범대륙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유산 공동정책과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필요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유럽 문화유산 네트워크’의 전례, 그리고 구체적인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로서 유럽 문화도시 운영을 살펴보자. 유럽연합은 유럽의 공동유산을 보존하고 증진하며, 문화유산에의 공적인 접근을 장려, 문화유산에 관한 자각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 연합 테두리 안에서 창성된 각종 기금이나 기구는 유럽 전역의 문화유산을 지역발전과 고용에 연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유럽 연합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은 이미 협약의 형태로 두 차례에 걸쳐 기본방향이 제시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라마다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3원조직에 의해 운용된다. 프랑스는 건축, 도시, 경관유산 보전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문화유산보존지구제도를 1993년에 실시하여 문화재보존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여 시·도지사가 최종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이탈리아는 지정문화재 파괴, 이동, 개조, 보수 등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적 발굴도 허가제이다. 부동산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제와 옥외광고물 및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 중세도시 보존을 위해 시의회에서 도시보존 계획 또는 재개발 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이나 미국 역시 문화재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한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 문화재들이 본격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은 문화재 보호법을 통해 포괄성과 재산권 존중 및 중점 보호주의를 바탕으로 유형과 무형의 문화재를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가치에 따른 차별적 보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문화물보호법을 바탕으로 중국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여 애국주의와 혁명전통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제국가의 문화유산의 공동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의 분류체계의 확립과 문화재 보호 및 관리, 불법거래의 방지 등의 관점에서 동북아 각국의 공동대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역내 국가들 간의 이해의 증진과 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공동의 관리를 위한 정부간 협력기구 또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협력기구의 공동설치도 요구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발전을 위하여 유럽이나 아세안의 공동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제 발전이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매년 동북아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동북아가 인정하는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관심을 표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동북아에서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내 정부와 시민사회 상호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국제레짐이론에 따르면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집단인 지식인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는 법적, 정치적 사안이므로 민간차원의 협의네트워크와 함께 정부간의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간 협의기구는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뿐만 아니라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공동 개념의 정립, 문화도시 지정, 동북아 공통 문화행사기획, 문화재 반환, 보존, 복원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법적 협력 기초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인프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재의 개념과 분류 방법 등 문화재 행정의 표준화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공동규제가 필요하다.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협약으로는 제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UNESCO협약 등이 있는데 미체결국이 많으므로 실효적이지 못한 점이 많으므로, 동북아 지역 나름의 지역적 협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국 내의 국내법 정비, 민법상 선의취득제도에 대한 특별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 약탈행위 등으로 발생한 문화적 부채가 청산되어야 한다. 문화재 반출의 경우와 현재의 소유권 상황 등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반환의 방식을 마련하고 이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제도를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 문화유산과 문화재는 국가 상호 간에 공동 관심사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협의를 통한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협력 매커니즘의 구성과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와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동북아에 특유한 국제기구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그러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문화유산위원회 또는 동북아문화재위원회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북아 문화도시의 선정 등 문화교류사업을 위하여 공동의 문화사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해외 전시 등의 과정에서 관세법 등 관련국가의 수출입통제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며 문화재의 선정이나 포장, 운송 그리고 보험가입에 대한 기준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북아 사정에 보다 타당하고 광범위

한 이슈들을 다룰 포괄적인 국제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며 나아가 동북아 각국의 국내법의 정비도 요청된다. 이러한 방안은 하루아침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국이 서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의식적인 노력들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문화유산에 대해 자국의 소유의 개념보다는 공동 향유의 개념으로 전화될 때, 동북아에서의 과거 역사적 불행을 극복하고 진정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 한국-동남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 중 석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

권 승 호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한호아시아연구소 부소장)

최 태 영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한호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타당성과 주변국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라는 좀더 넓은 틀 안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전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활동의 네트워크 체제 속에서 이 노력이 전개될 때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형성에 대한 한국의 노력이 동북아시아적 특수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동아시아적 보편성과 지지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이론적, 실천적 무장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주도국으로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 대해 상대적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의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향후 동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또 다른 축인 동남아시아 국가와 한국 간의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 ②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관계 현황 분석, ③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문화적 동질성과 한국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노력의 동남아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려 한다.

현실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각종 현안들은 동북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으로 중국의 동북아 정책은 단순히 중국의 한 지역인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국의 아시아의 중심국가 정책과 연동되어 있다. 단순히 동북아 지역의 현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티베트 등과의 영토분쟁, 한국과의 역사분쟁 등의 문제들을 국제적으로 국가 간의 외교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내부분제로 국한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중국의 다른 지역의 현안을 고려한 아시아 전체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일본의 동북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들은 서구화된 제도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방세계의 대 동아시아 관계의 중심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치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서구세력에 ‘협조하는’ 아시아의 대표 국가를 자임하고 경제적으로 동아시아를 산업 구조적으로 종속화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꾀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에 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동북아에 대한 주도권을 서방국가의 힘을 기반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한국 중심의 동북아시아 지역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한국—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유용하고 중요하다. 거시적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한국과 동남아시아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상생의 경제 협력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형성시켜 한국과 정치 및 사회문화적 협력을 더욱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긍정적 태도는 역사적 배경에서도 찾을 수 있을 정도이다. 한국과 산업적으로 협력관계에 있고, 정치적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지역의 대안문화로 한국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동남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체계적인 노력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국가전략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성격을 분석하여 한국과의 문화적 근접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근접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한국과 동남아시아 각국간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류활동의 수준을 각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4개 국가 모두 역사적 경험과 현재의 환경이 한국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즉 반복된 외세와의 전쟁과 독립의 역사, 식민지경험, 중국의 영향, 급속한 산업화와 개방을 경험하였다. 동남아국가 중 역사적으로 태국과 베트남은 동북아 문화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고 반대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동북아 문화권의 영향보다는 서남아시아와 유럽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정치이념의 관점에서

태국이 한국과 가장 높은 근접성을 보이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이다. 하위 항목에서 베트남은 한국과 공통적으로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가치의 측면에서는 계획경제체제인 베트남을 제외하고 모두 자본주의 체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도 1986년 경제개방정책 실시 이후 시장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근접성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적 가치의 측면은 베트남과 태국이 한국과의 근접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기독교적 가치는 공유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전통적 가치 측면에서 베트남, 태국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 유교적 가치가 국민의 기본 가치로 깊게 뿌리내려 있다. 언어적 측면에서는 각국 모두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모두 소리글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과의 근접성은 높은 반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낮은 편이다.

문화적 공동체 형성 기반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관계 수준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가장 높은 교류수준을 나타내는 국가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순이다. 태국이 한국과 근접성이 가장 높은 데도 베트남이 태국보다 높은 교류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류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경제로 이는 한국이 베트남과 수교하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베트남은 한국 산업 자원 기지와 노동집약적 부문의 국제 생산 기지로서 경제적 결합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양국 간의 활발한 인적 자원 교류와 한국 대중문화상품의 진출 등 사회문화적 교류관계의 수준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까지 한국—동남아 국가 간의 교류는 대부분 경제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정치, 사회문화적 근접성의 튼튼한 기반이 없는 경제적 이익관계를 목표로 한 경제적 근접성은 언제든지 해체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일본은 경제적 가치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형성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동남아시아 간의 교류관계를 진정한 협력과 공존을 위한 사회문화적 협력관계로 변화시키

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협력관계 강화는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국가 이미지 형성으로 한국이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여기에 중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과 동남아시아간의 다양한 이익집단의 문화 공동체 형성이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및 외교 교류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현지 진행하고 있는 문화외교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정부관계자의 문화적 인식과 수용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국 행정제도의 현지화를 지원한다. 둘째, 경제활동 교류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국 투자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한국관계 종사자인 현지인들의 한국 이미지와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며, 한국 투자기업을 통한 사회문화활동과 더불어 한국투자기업의 한국문화 마케팅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사회 교류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한국학 교육의 지원을 강화하고, 베트남 내의 한국인의 불법적인 행위의 근절을 통한 도덕성과 한국과 현지 종교 및 인권단체 등의 민간 사회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넷째, 문화 교류관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문화상품과 연계한 문화교류 행사의 전략적 기획과 지원을 도모하며, 양 국가간의 문화활동 단체의 연대를 강화한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정부 부처간의 전략적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도적'이란 의미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각 부문의 이익단체의 문화공동체 형성 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문화제국주의'적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즉, 문화적 근접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호 호혜적인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에 대한 충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 한 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 관 희 (")
황 병 덕 (")
허 문 영 (")
박 형 중 (")
이 우 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동북아는 지정학적 요건이나 역사적 차원에서 밀접한 상호관련을 맺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 상호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동북아의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현재에도 경제협력을 비롯 다양한 형태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국가간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및 각 지역의 블록화도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현실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국가 간의 협력관계는 그 이면에 각 국민간의 정서적 거리감과 외교안보적 불신을 동시에 배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공동체는 아직 그 시도조차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세계적인 냉전해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반도는 냉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반도는 정치, 외교적 측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역사적인 경험과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한반도가 동북아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차원의 평화문화 형성을 지향하고, 한반도 내부의 냉전문화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문화 형성을 지향하고, 한반도 내부의 냉전문화 역시 동북아 평화문화라는 보다 포괄적 틀 속에서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국제협력 추진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평화문화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고찰과 아울러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탈근대적 접근을 지향하는 실천적 노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3국의 평화문화 실태 및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 중국과 일본의 평화문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각 국가간의 평화문화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비교사회론적 관점에서 동북아 평화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냉전 종결 이후 제기된 탈근대적 평화문화의 조성이라 함은 국가 간 전쟁, 사회내부에서의 다양한 폭력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문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평화 운동의 국제적 과제로서 네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군축과 인간안보’에 관한 것이다. 둘째, ‘무력분쟁의 방지, 해결과 평화적 이행’에 관한 것이다. 셋째, 평화와 관련된 국제인도주의법, 인권법과 그 기구들에 관한 것이다. 넷째, ‘전쟁의 근본적 원인/평화의 문화’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평화운동으로 신사회운동을 제기한다. 시민사회에서 네트워크 형태로 조직되는 신사회운동은 의회를 넘어서는 직접행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참여 정치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근대적 이성만능주의가 빚어낸 현대사회의 위기를 시민사회 자체 동력의 의거하여 시민들이 해소함으로써 사회평화를 유지·발전시키려는 사회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동북아 각국의 평화문화실태를 비교하였는데, 우선 한국의 경우를 보자. 분단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형성했으며, 이는 다시 남북한 사회의 내부에 중요한 내적 영향을 미쳐왔으며, 이는 냉전문화 즉 친미와 반공주의로 고착되어왔다. 한국 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것은 민주화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전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반전과 관련된 흐름, 여성과 관련된 운동들, 평화교육운동,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평화신학 운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반면 북한의 평화인식에 대해서 저자는 북한의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북한의 통일론이 남북한 총선거에서 연방제 통일론으로 바뀌어 온 것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공산화통일과 체제유지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이나 평화보장체계의 수립 등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가장 먼저 근대화의 여정을 걸어간 일본의 방식은 제국주의적인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일본 내외에 강압적 힘을 행사하면서 진행되었으며, 결국 2차세계대전의 패전으로 귀결되었다. 패전 이후 일본은 빠른 속도로 서구적 가치와 기준들을 흡수하면서 발전을 이루어 갔으나, 이 과정에서 전후 서독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시민사회의 성찰적 과정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경제적 발전에 성공했면서도 성찰을 통한 과거문제의

해소에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동북아국가들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피해의식을 유도한 2차대전의 패전은 일본 스스로 동북아에 행사했던 강압적인 힘에 대해 적극적 인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여, 결국 각 국가 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탈사회주의 발전과정을 겪고 있는 중국은 거대한 인구와 영토를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의 변화로서 지구촌에 영향을 미치며, 동북아의 전반적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근대화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권위주의적 통제 하에서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평화문화 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비정부기구의 활동의 근본적 제약을 의미한다.

한편 유럽사회에서는 평화란 보통 인간 집단 간에 전쟁이나 폭력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다. 평화는 정치적 성격만을 지닌 개념이 아니라 유럽사회의 가치합리적으로 자리잡은 중요한 문화적 구성요인이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탈근대적 평화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는 실현가능한 미래의 비전과 폭력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시민사회 내부의 힘으로 지향할 것을 원칙으로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일환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본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독일의 정치교육은 교육이라는 실천적 노력을 통해서 평화문화를 정착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세계화의 시대이며 종래의 집단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간의 '협력안보'로 표현할 수 있는 안보의 상호의존 시대이다. 단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구속력 없이 안보협력을 이끌어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므로, 협력안보는 집단안보 또는 동맹 형태의 안보 협력 체제의 토대 위에 보다 느슨하고 포괄적인 형태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과 UN사령부 체제하에서 기본적인 안보체제를 확고히 하는 토대 위에, 중, 일, 러 등을 포함하는 협력안보 개념을 상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실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필요로 하게 된 배경

에는 첫째, 국가간의 관계에서 압력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둘째, 정치, 국방, 외교 등 고위정치 중심이었던 냉전시대와 달리,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경제, 문화, 사회복지 등 저위정치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만, 동북아에서는 역내국가들간 NATO와 같은 집단동맹 개념이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진 양자동맹 관계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양자동맹 관계에 대한 대체나 대안으로서보다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자간 안보협력 대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북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는 서로 입장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통해 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②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확산하며, ③ 가능하면 자유체계에 기초한 한민족의 통일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기조는 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그리고 ②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요약된다. 한편 러시아는 ① 한반도의 비핵화, ② 한반도의 안정 유지, ③ 영향력 확대 등의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동북아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제약요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내 국가들간 기초적 신뢰결여 및 수교상태 부재는 다자간 협상의 가장 큰 난제로 남아 있다. 둘째, 역사적, 민족적으로 상이한 전통과 독자적인 관습을 유지해 온 것이 동북아 국가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공동의 목표와 이해의 결여, 문화와 가치에 대한 동질성의 결여가 정치·군사·안보 측면에서의 신뢰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 협력안보의 '제도화'에 따르는 기구유지나 비용문제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정착시키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다자 외교안보 협력의 추진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화'보다는 '레짐' 형태의 '조화된 협력'방식의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협력 안보'에 대한 역내 국가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공동 안보 관심사항 발굴 및 이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겠다. 셋째, 대화·협력을 향한 습관의 형성이 필요

하므로 제약 요인은 적극 억지하되,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넷째, 참여국가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과 미, 중, 일, 러, 몽고 등 7개국이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구도에 포함되는데 이의가 없 으나, 대만과 캐나다의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시민사회와 민간의 노력이 주목되는 이유는, 동북아의 경우 국가영 역은 동북아 근대사의 정치적 영향과 외교안보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 다는 점에서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시 민영역은 국가보다 자율성을 가지며, 국가간 협력을 자극하는 기반으로 작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대체로 한국의 NGO는 국가 및 의회 에 대해서 비판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적인 권익추구의 형태로 발전해 왔음 에 비해, 중국과 홍콩 등과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국가와 NGO의 공생관 계를 토대로, 주로 사회봉사와 복지 부문의 NGO가 발전해 왔다. 보다 엄 밀한 의미에서 평화운동과 관련된 NGO가 존재하는 국가는 동북아에서 한 국과 일본이라 할 수 있으나, 두 나라는 역사적 상황과 당면 과제의 상이성 때문에 주요 이슈와 NGO들의 특성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두 나 라의 NGO들은 넓은 의미의 ‘평화’ 관련 문제를 놓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 각 국가평화문화에 대한 비교사회론적 인식은 동북 아 평화문화 형성에 대한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이를 기초로 정부 와 민간차원의 협력적 역할을 토대로 구체적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시초단계부터 종합적인 시민사회와 민간영역에 대한 지원프 로젝트가 작동되어야 한다.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호 (")

배정호 (")

한국은 전 세계 150여개 국에 660만 명의 재외동포가 있으며, 전체 한인 인구 대비 해외동포들의 비례로 보면 7.5%로 이는 이탈리아, 이스라엘 다음 가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해외 한민족 사회의 형성 연원은 오래 되었고 이주 배경도 다양하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 관습, 생활양식 등을 유지하며 여전히 ‘한민족’으로서의 정향을 버리지 않고 있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관점에서 동북아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동북아 문화공동체라는 구조를 구성하는 하위영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이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 공동체의 하위 구성소인 동북아 차원의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태를 연구하는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는 통일된 단일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성원들을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동포의식에 바탕을 두고 정서적 연대를 형성하는 문화공동체의 성격이다. 결국 평화변영정책의 실천과정으로서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의 인식적, 문화적 배경으로서 동북아 한민족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연계하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민족 문화공동체 형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일본, 중국, 러시아 극동의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실태를 분석한다. 첫째, 19세기 말엽과 일제 강점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 중국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민족사회의 연원과 형성, 변화 과정을 역사적 차원에서 재조명한다. 둘째, 일본, 중국 및 러시아 극동지역의 한민족 사회의 현지 적응 실태 및 문제점, 한국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다. 셋째, 일본, 중국 및 러시아 극동 각 지역의 한민족 사회의 실태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한민족간의 (문화)공동체 형성과 본국 한국과의 교류 협력 등 관계 발전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차원의 한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한민족 사회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의 산물로 형성되기 시작한 재일한 인사회는 대체로 하층 노동계층으로 빈곤한 생활을 여위하며, 대도시 주변의 집단부락을 형성하면서 생활하였는데, 1945년 종전시 약 200~240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다. 상당수는 한반도로 귀향하고 약 60만 명 정도의 한인이 남아 전후의 재일교포사회를 형성하였다. 이후 한반도 분단에 따른 남·북한의 정치적 영향으로 재일한인사회는 분열되고 대립하였다. 한국을 지지하는 재일 한인들은 ‘조선건국촉진청년연맹’(건청), ‘신조선건설동맹’(건동),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민단)을 중심으로 결집하였고, 북한을 지지하는 한인들은 ‘재일조선인연맹(조련)’,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를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결국 재일 1, 2세 한인들은 민족의식이 매우 강하여 정치적·경제적 차별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의 동화·귀화에 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3, 4세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재일한인사회는 다른 문화적 특징을 띤다. 첫째, 재일한인 3, 4세대들은 일본사회에 정주하여 대체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 이념보다는 일상적 이해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사회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 둘째, 탈냉전시대의 도래에 따른 일본 국내외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약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전개에 따른 남북관계의 개선 및 긴장완화 등의 영향으로 민단과 조총련간의 대립구도가 약화되고 있고, 조총련에서 민단으로 전환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재일한인 2, 3, 4세들의 민족의식 약화로 인하여 민단과 조총련이 조직의 쇠퇴와 몰락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한인공동체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반면,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재일한인들의 한국 및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도입하여 정착한 소위 ‘뉴커머(new comer)’ 그룹이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대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 일본에 왔고, 따라서 문화적으로 한국과의 연계이래 일본 속의 현대 한국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일정 부분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

결국, 민단과 조총련계 한인사회의 화해·협력의 증대와 더불어 민단·조총련·뉴커머 등이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협력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이는 일본 내의 한민족문화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면서 한일 문화교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한민족 사회

중국의 조선족들은 오늘날의 한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즈음에 개최된 한국의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이다. 2000년대 초 현재 200여만 명에 달하는 동포들이 중국에 살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우리나라 건국 이후의 이민과는 달리 특히 20세기 초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을 피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후예들이다. 조선족 3, 4세대는 물론 5, 6세대들은 대부분 우리말을 잊어가고 있으며, 모국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민족의식과 주재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의식을 동시에 갖게 되는 이중적 정체성 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조선족들 스스로는 절대다수의 조선족들이 민족 정체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중국의 개혁·개방이 중국 사회 구조 전체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중국 조선족사회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의 이동과정 동안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포함하여 동북 3성 거주 조선족들 중 많은 수가 한국 등 해외 또는 중국의 타지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족 사회의 해체에 대한 우려가 등장하였다. 또한 중국 조선족은 기본적으로 이중민족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본민족(한민족/조선민족)으로서의 속성과 중화민족으로서의 속성이다. 이 두 속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일체 내에 있으면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중국조선족 민족 사회의 해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조선족사회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선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전만능주의가 생겨나고, 도덕성의 결핍 현상이 나타났다. 서방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학습할 것은 하고 제거해야 할 것은 제거해야 하는데, 조선족사

회는 서방의 부패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패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혼율 상승, 남녀관계 문란, 허황되게 큰 돈을 벌려는 생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내 한민족사회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 내 한민족들이 자신을 중국 국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중국 사회의 핵심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중국경제·정치的主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경계인’으로 살고 있다. 둘째, 중국 내 한민족사회는 여타 지역의 한민족사회에 비해 강력한 공동체사회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집단적인 삶을 영위하는 공간인 조선족 자치주가 설치·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조선족은 몽골족을 제외할 경우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 고국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조선족문제를 여타 민족문제에 비해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 넷째, 중국내 한민족은 높은 교육·문화적 소양을 지닌 민족으로 특징지워진다.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극동 러시아의 한민족

소련 해체 전 고려인 수는 50여만 명으로 추정되며, 고려인은 여러 공화국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치주를 갖지 못하고 있다. 유동인구의 수가 많아서 러시아 거주 한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극동전체에 약 10만여명의 고려인이 있으며, 연해주 일대에는 4만 명에서 최대 5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인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국적문제와 경제문제이다. 정체성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 고려인들은 높은 수준의 현지 적응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보다는 러시아를 가깝게 느끼고 있다. 고려인 사회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는, 소련 정부는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러시아는 고려인 사회가 소수민족으로서 러시아 사회에 위협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 단, 러시아는 고려인 문제는 한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비교를 통한 분석을 해보면,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별로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주국가 내에서도 한인들의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한다. 셋째, 해외 한인들은 두 가지 이중 정체성을 갖게 된다. 하나는 거주국에 대한 정체성과 한인으로서의 이중 정체성이며, 다른 하나는 남한과 북한 어느 쪽과 보다 동질감을 느끼는가이다. 셋째, 해외 한인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정체성이 약화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의식이 약화되어 간다는 세대별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민족 정체성 및 한인사회의 동질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거주국의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한민족 사회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다. 셋째, 동북아 3국의 한민족 사회가 한민족 공동체에 갖는 관심은 유사할 지라도, 그들의 실질적 참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는 각국의 정치제도, 정치이념, 정치발전 정도와 한민족 사회의 정치·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창화 (단국대 교수)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방민석 (단국대 교수)

전후 동북아시아는 정치·군사적 갈등 때문에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1990년대 소련의 붕괴로 국제정세는 탈냉전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동북아에서는 남북한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이 진전됨에 따라 동북아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간 잠재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개방적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동북아 국가들이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경제협력, 문화교류 그리고 정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북아공동체의 형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에 의해 구성된 유럽통합모델은 ‘유럽연방’이란 ‘연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통합과정은 EC/EU조약에 기초하여, 잘 정비된 행정조직체인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된 통합 수순을 밟고 있다. 본 연구는 이미 유사연방국가(quasi-federal state) 수준의 국가통합체를 달성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조직을 분석하여 향후 창설이 예견되는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EU 및 EU 기관들에서 발간된 문헌과 회원국 정부의 실무자료분석을 통해 유럽연합이 형성되어야 할 배경 및 전제조건이 분석되었다. 둘째, 유럽연합의 행정부로서 집행위원회 조직을 최근의 EU 공식문헌을 중심으로 파악하며, 행정조직의 현황과 운영상황을 상술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 공동체 행정조직 구축 및 운영방안이 기술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1950년대 창설된 유럽공동체에 기초하여 성립된 것이므로, 유럽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럽공동체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유럽공동체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라는 세 개의 공동체를 포함한다. 유럽연합은 한편으로 이 세 공동체를 포함하는 전체조직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 EU의 제2기동으로서 공동외교안보정책과 제 3

기동으로서 형사사건에서 경찰 및 사법협력의 틀 내에서 행위하는 주체를 위해 존재한다.

유럽통합 과정 속에서 유럽이 지향하고 있는 향후 유럽의 국가모습은 ‘유럽연방’(European Federation)이다. 아직은 유럽연합이 연방국가화 되지는 못했지만, 연방국가의 바로 전 단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연방국가(Federation), 국가연합(Confederation) 그리고 유사연방국가로서 유럽연합은 형태상으로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결합되는 ‘국가결합’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거나, 내용상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초국가공동체로서 유럽연합 형성의 전제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유럽연합은 경제, 정치, 문화 및 법공동체로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은 법공동체에 기초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유럽공동체의 바탕이 되는 유럽연합법이 전통적인 의미의 법분류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의 새로운 법질서’라는 것이므로, 유럽연합을 단순한 국가간의 모임이 아닌 ‘초국가적’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충성의 원칙은, 유럽연합의 권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C조약 제5조에 따르면, “공동체는 이 조약에서 부여받은 권한과 할당받은 목표의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 공동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된 행동의 목표를 회원국들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수 없고 따라서 제안된 행동의 규모나 효과에 의하여 공동체가 더 잘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행동한다. 공동체에 의한 어떠한 행동도 이 조약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유럽공동체 형성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첫째, 공유가치의 비교이다.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의 고유한 유교문화의 전통은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동질성을 지닌 공동체국가 형성의 공유가치로서의 근원이 될 것이다. 둘째, 국가간 전쟁경험으로 인한 전쟁방지 및 평화유지의 필요성 문제이다. 셋째,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제

기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문화적 교류의 필요성이다. 다섯째, 국제무대에서의 정치협력의 필요성이다.

집행기관의 행정조직 구축에 대해, 동북아 공동체는 단계별로 공동체 행정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한다. 집행위원회 조직의 구축이 선행되고 2단계로 공동체 각료이사회 그리고 3단계로 공동체의 입법기구와 사법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조직은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위원회형(Commission)의 조직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첫째,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 메카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조직의 장에게 집중되는 지나친 권한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위원회는 정부 내부에서 이미 개발된 아이디어나 결정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지지나 정당성 제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동북아시아 공동체이익의 수호자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의 ‘초국가적’ 내지 ‘연방적’ 측면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의 기능을 요약하면 첫째, 집행위원회는 타 기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각료이사회는 제정한 법규를 실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집행위원회는 이를 실행한다. 셋째, 집행위원회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조약이나 법규가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집행위원회는 입장표명, 조언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 공동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킨다.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의규 (")

홍선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박병석 (서울사이버대 교수)

세계는 국제화·개방화·지식정보화에서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병행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동북아는 EU·NAFTA와 함께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는 데 인적 자원 분야는 경제특구 지정과 물류 중심지 건설 등 물적 분야와 함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중요한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식기반산업 및 디지털 경제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한 국가가 보유한 인적 자원의 양과 질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결국 인적 자원 개발 분야는 동북아 중심국가로 지향하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 제고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관리하고, 국외적으로는 주변국과의 상생적·상보적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 분야의 문화공동체 형성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과학적·협동적·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주요 국가의 인적 자원 실태와 개발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이들 실태를 바탕으로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경제와 과학기술분야, 인구와 노동력 분야, 교육 분야, 생활수준 분야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셋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이론과 논리적 배경을 파악하여 그 가능성까지 논의하였다. 다섯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적 자원(개발) 분야의 과제로 각국의 공동 과제와 우리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동북아는 지금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드러나는 각종 경제 발전에 따른 문제점들은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천을 유도하게 한다.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투입주도형 발전전략에서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적 자원 개발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 인력공급 중심, 거시적·정량적 접근방식으로는 인적 자원의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주도, 특히 산업계의 역할 강화와 인력수요 중심, 중위적·정성적 접근방식으로의 전환

이 필요하다.

유럽은 연합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언어교육과 이웃나라의 역사·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럽연합이 합의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럽인들 자신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또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교육정책은 유럽발전과의 상호 연관성을 배제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 유럽연합의 교육은 크게 국가별 교육, 유럽차원의 교육, 국가간 교육과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유럽 회원국들은 국가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국의 민족적 가치를 함양하거나 국가의 자존심을 키우고자 한다. 유럽차원의 교육은 재학생의 경우 유럽연합의 어느 지역에서든 거주할 수 있고, 졸업생의 경우 유럽연합의 어느 지역에서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유럽에 관한 정보 및 외국어 능력 등과 같은 지식으로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사회교육 또는 개인교육에 있어서 유럽적인 측면들이 구체화된 유럽시민의식 교육도 포함된다.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 직업교육은 유럽공동체가 기초하고 있는 경제적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다. 유럽공동체의 산업이 과학적·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연구와 개발 분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여러 장애가 예상되고 있다. 즉 문화 및 언어 측면에는 문화의 다양성과 차별성 및 언어의 이질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문화적 장애 요인으로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 환경 및 지역협의 부재와 각국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첫째, 동북아는 강대국이 집중된 지역으로 대국간 관계의 발전은 아직 유동적이다. 둘째, 동북아 각국은 대외관계의 전략 중점을 아시아로 돌려야 한다. 셋째, 동북아에는 냉전체제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으로 지역 정세에 모순과 충돌이 잠재되어 있다. 넷째, 동북아지역은 발전 수준의 차이가 심

하면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추세이다. 결국 동북아 각국 간의 협력권이나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노력과 논의는 한 국가 또는 민족의 문화를 수단으로 할 경우 풀리지 않는 해묵은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모순은 확대 재생산되며,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배후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혐의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 강대국의 이기적 목적이 존재하는 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권역 개념이 아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느슨한 교류·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 국가 간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분야의 교류·협력이나 환황해권 경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1세기에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 경쟁시대로 변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지역통합은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상호 인적 자원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의체 혹은 공동체 형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통합체를 만들기에 앞서 동북아 3국의 분야별 문화공동체를 구성하지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많은 장애요인은 결국 상호 불신과 역사적 배경이 큰 작용을 하였지만, 금세기 들어 3국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류 등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를 희망하는 추세로 급변하고 있다. 셋째, 21세기에는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다. 문화산업은 결국 사람이 주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상호 공동으로 관련 산업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넷째, 다원화사회가 도래하고 세계화 추세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환경, 에너지, 폭력, 마약, 일기예보, 인구, 식량, 국제행사공동개최 등의 문제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다섯째, 정치적 권위가 저하되어 가는 추세 속에 시민사회의 등장, 세계적 보편주의와 개발국가나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의 조화에서 새로운 정치모델 또는 사회모델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시대적 필요가 있다. 여섯째, 21세기에는 아시아적 가치가 선별적으로나마 세계적 보편윤리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서구사회의 급속한 사회변화로 발생한 병

리적 현상들에의 치료적 가치에 대한 요구는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일곱째, 여가사회 및 노령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많은 문화 사업들은 국제적 협력관계를 통해 보다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관광산업이나 공연예술분야사업 및 문화네트워크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다. 둘째, 동북아 3국의 경제적 잠재력과 상호의존성이다. 셋째, 인적 교류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EU 사례에서도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유럽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은 문화적 교류를 위한 교육적 역할의 증진과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다양성을 공유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하여 유럽공동체 의식을 확대시키고, 유럽문화에 대한 공통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은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회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회원수가 증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 우선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은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서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장애 요인의 해결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존의 역사적·문화적·지리적·사상적·언어적 장애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의 전제로 동북아 3국의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FTA협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상호 노동력의 충분한 교류나 수요가 증대 될 경우 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은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첫째, 상호 보완성 확보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은 점진적인 방향에

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EU나 NAFTA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타 분야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기본적인 전제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 추진의 과제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한 3국의 부처 책임자 및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추진에서 우선 인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류 수요가 많은 분야의 기술자격을 공동으로 개발·교육훈련·인증·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협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전 재 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 정 훈 (서울대 교수)

이 원 우 (한양대 교수)

송 영 선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문헌과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대만, 일본 등의 아시아 2개국과 지역협력 및 공동체 구성의 선도자인 EU의 문화협력 현황 및 구체적인 문화협력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본은 동북아 최고의 선진국가로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빠질 수 없는 당사자이며 문화부문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로서, 대만은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지역협력 및 문화협력에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로서, 마지막으로 EU는 세계유일의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으로서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동북아 중심국가라는 개념은 다소 저항감이 있으나 공동체라는 개념은 친화적이다.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블록화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동북아 공동체의 형성은 동북아의 발전기틀을 다지는 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문화교류를 통하여 일본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일본국민의 대외활동을 돕는다는 목표아래 다양한 문화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통합적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EU는 초창기의 경제협력을 넘어서 정치, 경제, 안보, 문화에 이르는 다방면의 공동체 내부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EU 이외의 여러 국가들과 지역수준을 넘어서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로 경제위주의 교류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정치협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큰 권역별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류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만의 문화교류는 특별히 동북아를 겨냥한 문화교류정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같은 대외문화홍보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률 문화적 접근방법에 기초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문화 구조적 접근에서 문제되는 바는 이질적인 문화간의 갈등이다. 우리 주변에서는 크게는 지역감정에서부터 작게는 부부싸움에 이르기까지 문화갈등현상이 곳곳에서 관찰된다. 산간 도로를 횡단하던 야생동물들의 죽음도 종간의 문화차이 때문이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넓은 의미의 문화 전반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구축이지만, 유럽통합 과정으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우선 일차적으로 상호비교와 이식·

수용·통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문화의 비교·통합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다. 법의 지배 원리와 법제도의 합리성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인간이성의 보편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 동북아 국가에서의 법문화비교는 주로 법제도의 역사적·문화적 기반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제는 개별 법제도들을 대상으로 그 실제적 기능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방법론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든 동북아 국가들이 서양법을 계수하여 상당기간 이를 시행하여 온 경험이 있으므로, 이제 그 실제적 기능을 비교함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있는 법문화적 요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문화의 통합의 방법을 요청할 것이 요청된다.

유럽공동체의 문화 공동체 형성정책은 오늘날 유럽공동체법에 직접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유럽공동체의 활동이 모든 회원국들의 문화를 꽃 피우는 데 기여한다고 규정한 것은 유럽공동체가 문화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공동체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이전까지는 문화에 관한 관할권이 없었고, 사실상의 활동을 통해 문화적 활동이 이루어졌다. 유럽법은 개별국가의 국내법과 달리 지속적인 발전과정에 있는 동태적 개발적 법체계이다. 따라서 경제활동 이외에도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교육분야에서였다. 유럽연합 이외의 공적 기구로는 유네스코, 유럽이사회, 민간기구로는 유럽문화센터, 유럽문화재단 등이 있다. 유럽연합의 문화 정책의 법적 기초는 문화영역에서 기본적 자유, 차별금지원칙, 문화영역에서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별 영역적 노력은 교육, 문화교류 및 지원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문화공동체로서 유럽연합의 전망은 유럽연합조약상 문화관할권 도입의 영향으로 문화와 관련한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었고, 종래 행해지던 문화활동들이 지속적인 성격을 취득하고, 문화영역이 유럽연합의 승인된 활동 영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일본은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부차원의 활동을 다방면을 통해 진행하고 민간단체의 국제교류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2002년 한·일 공동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한일 양국에서 전 세계를 향한 공동작업인 월드컵 축구대회 한·일 공동개최의 성공과 그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협력의 대표적 예이다.

중국·대만에서의 문화교류사업은 한류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외국문화를 흡수하면서 역으로 자국 문화상품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외국문화에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을 독려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오랫동안 우호적인 문화교류를 지속해 온 전통을 지니고 있는바 꾸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친척방문, 문화교류, 무역 등 민간차원의 제한된 교류가 중심이었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확장을 위해 제시될 수 있는 관계는 한국 몽골의 법률문화교류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종, 언어, 역사, 민속상의 동질성과 유사성을 통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하며, 양국의 법적 동질·이질의 요소들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의 협약이나 계약을 마련하여 한·몽 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시켜 본다면, 동북아 국가들이 문화공동체의 형성에 관하여 인식을 같이 하더라도 이를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동북아 국가들 상호간에는 문화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약간의 국제규범들이 존재한다. 조직규범으로서 아시아개발은행설립협정,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헌장, 아시아·태평양지역사회·문화센터설치협정 그리고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규범들은 그 적용범위가 동북아를 넘어선다.

물론 개별 국가들의 쌍무협정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정부와 중화민국정부 간의 문화협정이 그 예에 속한다. 한국과 일본간에는 산업 또는 경제에

관한 협약들만 다수 존재할 뿐 문화부문에 관한 공동의 규범은 없다. 동북아 국가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직접 목적으로 삼는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도 우선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약 등의 제정이 긴요하다.

법의 위계질서상 국내법은 국제법을 이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제법의 실효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각국의 국내 법질서에 의하여 담보된다. 물론 우리 국내법은 동북아 권역내의 다른 나라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법을 정비하더라도 상대방국가들이 유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국제규범이 정립되기 이전이라도 국내법의 정비가 아주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현행 국내법 질서는 문화와 문화공동체 그리고 동북아 문화공동체와 친하지 아니하다. 문화 내지 문화공동체와 관련이 많은 교육·학술, 문화·예술, 문화산업, 청소년·체육, 관광·레저 등의 분야에서 현행 법령들은 국제교류·국제협력 및 교류·협력 일반에 관하여 다수의 근거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항들이 조직법상의 사무분장에 치중하고 있을 뿐,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이념이나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문화사업 분야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된 지원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영화진흥법은 금고의 용도에 “한국 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국제·외무 분야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은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재정계획과 사업별 기금 사용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들 기금이나 계획들이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와 문화공동체 그리고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적인 이념과 각종 아이디어 그리고 실행방법 등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실정법 질서의 정비가 필요하다. 조직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인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수많은 계획과 재

원들을 집중시키고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필요하다. 동북아 문화공동체형성지원법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전체의 철학과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다. 이 기본법은 추진 조직과 기금 그리고 계획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들과의 접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을 현실세계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이 국가적 의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은 자국의 중심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 국가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공동체 사상이기 때문에,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조속히 국가의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 기업인, 언론인, 시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민간차원에서의 창의적 아이디어 수렴과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호이해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와 공동의 교육기관 설립, 동북아 고등학술원의 설립, 해외 동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교류 확산 유도, 한류를 통한 문화적 혼용, 사이버 공간을 통한 포스트 모던적 패러다이스 구축을 통한 윈-윈(win-win) 기반 확충, 동북아 공동의 문화사업의 확대, EU의 예를 통한 교육을 통한 효과 창출, 종교, 문화소통, 스포츠, 대중매체, 마지막으로 공동의 역사교과서 제작이 요구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 진 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도 중 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화공동체의 궁극적 지향점이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범공동체에 있다고 할 때, 형사법은 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동북아시아 관련 국가들간의 법적 합의(조약이나 협약 등)의 형식으로 공동체가 일정한 제도로 뒷받침될 경우에는 공동체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역내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수단의 구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구촌의 세계화현상은 형법의 관점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첫째, 국제적 차원의 형사법 적용의 관점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법적 차원의 대응이다. 둘째,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형법규범이 국내형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써 국내형법의 규범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 즉 동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세계화는 국경초월범죄의 증가와 심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 검거, 소추 및 처벌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동북아시아 관련국가들 상호간의 형사법적 의사소통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표 하에 동북아 지역 국가의 형사법제도와 형사법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혀내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경초월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마약밀거래, 테러범죄, 사이버범죄, 돈 세탁행위 등이 있다. 그러나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전통적인 대응수단으로서 범죄인인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인터폴을 이용한 수사공조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대응에 어려워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 형사법계의 조화가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범문화권이 이 지역의 대중에 의한 협동적인 노력위에 구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시아 관련국가의 형사법이 상당한 정도로 서양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각국의 전통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동북아시아 관련국가의 법은 이 지역 국기와 국민들이 함께 육성해 온 역사적 구축물, 즉 역사적 공유재산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동북아시아문화권(한자법문화권)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극단적인 한자의 약자화가 진행되고, 한국에서는 두드러진 한글 사용정책에 의해 한자의 사용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관련국가 형사법문화의 조화가능성을 위한 과제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형법은 유럽공동체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의 대처가 필요한 중범죄를 지킴의 형식이나 대강결정의 형식으로 발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역내에서 과거보다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범죄투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유럽연합차원의 형법적 대응은 목적중심적이고 효율을 최적화하는 형사정책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 유럽연합의 형법이 행정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법치국가적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 유럽연합의 제재법과 체포에 관한 규정들은 내용의 부정확성과 사법적 통제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과 같은 반론이 지적되고 있다. 어쨌든, 유럽연합의 형사법적 기초의 정책적 함의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의 형사법질서가 일차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형법질서를 창설하고 있다. 둘째, 유럽연합의 형사법질서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사법 및 내무영역에서 지역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유럽연합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각국의 형법질서의 동화 내지 조화는 동북아 지역에서도 중대한 의미를 던져주게 될 것이다.

유럽지역에서의 유럽통합에 관한 논의의 역사가 매우 깊은 반면에, 동북아지역은 지금까지 정치·경제적 통합의 노력조차 거의 없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공동체가 구체화되기까지는 매우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공동체의 형사법적 관점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장기비전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편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나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러한 조약에 기초하여 개별 국가들이 국내 이행입법을

완료했다는 점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간의 형사법을 조화·발전시키는 주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동북아 핵심적 지역 국가로서 한국, 중국 및 일본은 공통의 법문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저항 없이 형사법의 조화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범죄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사회는 범죄 진압에 공통이익을 가진다는 점, 동북아지역 국가들 간의 교류가 긴밀해짐에 따라 국경초월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졌다는 점, 이러한 국경초월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들의 도움 없이는 효과적인 진압이 어렵다는 점, 형사문제에 있어서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장기비전으로서 동북아 지역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형사법적 관점의 전략으로는 ① 동북아 지역 국가들간의 형사법조화의 가능성을 토대로 하여 비교법연구 및 학회 등과 같은 비정부기구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②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동북아 지역 국가의 형사공조체제를 지금보다 더 확대·심화시키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형사사법 실무기관간의 교류확대와 이에 기초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공동수사그룹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중개자 역할뿐만 아니라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지리적으로나 경제발전단계 면에서 동북아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오랜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냉전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로서 지역협력체 형성에 대한 역내 합의를 도출하는 ‘도덕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점에서 형사법의 교류협력에 우리나라가 중개자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 이 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기획팀장)

주 영 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권 희 정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문화적 상징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장의 마련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 공동체는 단지 물적 자원의 교류나 공통의 제도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원들이 문화적 상징을 소통하여 공유함으로써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단위의 정적이고 형식적인 문화교류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문화적,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상징을 발굴하고 소통하는 역동적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국가정책 중심에서 간과되었던 문화주체들이 그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공동체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생산 및 소통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량을 확인하고 여성 문화유산이 지니는 공동체적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성문화유산은 역사 속에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여성의 삶을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을 포괄한다. 그 가운데 본 연구는 직조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에 주목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직조생산이 지니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파악하고, 한, 중, 일 주요 직조생산지 사례를 중심으로 직조유산 현황과 직조생산자로서 여성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여성문화유산은 역사주체로서 여성의 위상을 표출하고 여성의 삶을 표상하는 유무형의 상징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으로서 또는 집단으로서 여성과 관련된 유적지나 유물뿐 아니라 일반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하고 공유하며 세대를 통해 전수해온 다양한 기능과 기술, 지식체계 등이 포함된다. 유적지로는 여성역사인물과 관련된 유적지와 일반유적지 가운데 여성들의 공간, 여성들의 생산활동과 교육활동 등이 이루어진 공간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운동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 역시 여성문화유적지에 포함된다. 유형의 여성문화유산 가운데 유물로는 역사상 여성들이 생산하거나 유통시키거나 사용했던 다양한 물품들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유산 이외에 일반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산하고 공유하며 세대를 통해 전수해온 다양한 기능과 기술, 지식체계 역시 여성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 여성들이 생산해

은 직조 등의 공예와 음식문화, 여성들의 의례와 연행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여성들은 평생을 집안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로서, 부인으로서, 딸로서의 역할만을 해왔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실제 여성들은 각종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해왔으며, 이러한 점은 많은 여성문화유산을 통해 조명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직조생산은 여성들이 전담해온 대표적 분야로서 역사 속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과 여성들의 특수한 문화를 표상하는 여성문화유산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직조생산을 통해 여성들은 가구 내외부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 여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들의 특유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했다. 직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들이 행하는 핵심적인 일로서 보편적 여성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한, 중, 일 3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남성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여성들은 길쌈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뛰어난 직조 능력을 갖춘 여성은 당당한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감을 지닐 수 있었다. 물론 국가 체계가 발달하면서 직조노동에 대한 착취가 강화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압력 하에서도 여성들은 직조를 통해 사회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신들 특유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직조기술은 동북아 지역 내 문물교류의 핵심이었으며 고대부터 여성생산자들은 직조기술의 전파자로서 동북아 각국의 문화발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런데 19세기 말 직물 시장 개방과 공장제의 발달로 인해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하면서 각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대표하는 여성생산자들의 면모는 크게 퇴색했다. 여성생산자들은 저임금노동력으로 전락하는 공통된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직조는 오직 가난한 여성들의 힘든 노동으로만 인식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착취와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연대운동을 펼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각국의 주요 직조생산지에서는 전

통직조를 중심으로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소 환기되고 있다.

동북아 3개국의 주요 직조생산지를 중심으로 직조생산현황과 여성생산자의 위상,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의 형성 양상을 살펴본 결과, 각국의 역사와 경제발달과정에 따라 현재 직조의 생산체계와 그 안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매우 상이하며, 여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인식 정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직조의 산업화와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여성 중심적 직조 생산체계가 붕괴하고 여성들은 공장의 단순노동력이나 하청업자로 전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업화단계에 들어서면서 여성들이 계승해온 직조생산전통 자체가 크게 훼손되었다. 다만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전통 직조를 중심으로 여성생산자들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정 문화재로서도 그 가치를 공인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물질적 문화유산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하며 생산자 자신들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생산자로서 적극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단순한 기술자로서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전통직조를 비롯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었으며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생산체계가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다. 물론 대량생산체계가 정착되면서 여성이 단순노동력으로 전락했던 것은 일본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개중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경영자로서 여성이 성공을 거두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최근 들어 장인의 세계가 남성에게 의해 대표되던 기존의 패러다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장인 내지 여성전통공예사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 특징인 만큼, 각국의 이러한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동북아 여성문화교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국가 간 차이는 각국의 특수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체계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여성의 역사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교류가 지속된다면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여성들이 살아온 삶의 공통

점을 파악하고 향후 동북아 젠더문화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여성문화유산의 재발견은 갈등과 지배-피지배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동북아지역을 평등하고 역동적이며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공동체로 새롭게 탄생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역내의 각 부문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유산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적인 모색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GO 네트워크, NGO 네트워크, 전문가 네트워크, 지식정보 네트워크 등이 있을 수 있겠다. 둘째, 동북아 여성문화유산의 교류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행사 개최,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상설 전시관 설치 그리고 2005년에 열리는 제9회 세계여성학대회기간 중에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전시행사를 개최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문화유산지 관광 및 여성생산전통 체험관광 등의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혹은 대중용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해설서를 발간하는 것도 기획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향후 과제를 꼽는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국내 및 동북아 지역에 대한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한 지식정보의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겠다. 그리고 여성문화단체의 동북아 교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및 발굴·보존·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문화유산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위원회 내에 여성교류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여성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에의 관련 기금의 배정 또한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혹은 동북아 여성 문화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여성의제를 중심으로 한 NGO 교류의 확대도 모색하여야 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 철 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

오 해 섭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청소년교류활동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인간관계 조절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사회성, 관용성 등 사회 공동체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품성을 기르는 중요한 활동이다. 국내적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인 동서의 지역화합을 위한 근원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통일 독일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교류를 통하여 남북한 민족통합의 기초를 조성하는 가교적, 역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활발한 국가 간 청소년교류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우리 인력 자원의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결속력을 높여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시대의 주역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차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미 강조된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청소년교류의 시대사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북아 3국인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의 논리적 토대구축에서부터 법적·제도적 접근,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류실태와 장애요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근거로 동북아 지역의 청소년교류 활성화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부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청소년교류의 이론적 기초를 구축하였다. 둘째,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의 법·제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동북아지역 청소년 교류실태와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넷째, 동북아지역 청소년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북아지역 발전에 있어 청소년교류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조사는 단기적 차원과 장기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단기적 차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는 ‘상대국가 및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북아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동북아 지역이 갖는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장기적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한국이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북아 공동체의식(파트너십) 함양’과 ‘지난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구축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중·일 삼국 간 바람직한 청소년교류활동의 방향 및 접근방식에 관한 단기적 차원의 추진과제의 우선순위로는 첫째, 자원봉사나 공동작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 마련, 둘째, 정부의 지원 확대, 셋째,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넷째, 민간차원의 청소년교류기회 증대, 다섯째,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적인 차원의 추진과제로서는 첫째,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둘째 기획과정에서부터 참여 가능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의 교류형태 도입, 셋째, 정부의 지원 확대, 넷째, 민간차원의 청소년교류기회 증대, 다섯째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교류의 영역들 중에서 단기적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첫째 대중문화 분야의 교류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 각국의 청소년들의 유행과 의식을 파악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관심영역이면서, 공동체 문화 형성으로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민박활동(home-stay)으로 해당 국가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해할 수 있는데, 서로간의 친목도모 가능성, 포장되지 않은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제공, 상호이해 및 인간관계 형성이 교류의 핵심이며, 생활체험을 통한 문화이해 및 공감대형성의 최선책 등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지도자 교류로서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인 청소년교류를 이끌어 나갈 휴먼웨어로서의 청소년지도자 교류가 필요하며, 사업별 목적을 특성화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지도자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적 정비에 관한

단기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묻는 항목에서는 첫째, 청소년교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폭넓은 예산 지원, 둘째,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셋째, 민간 단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 넷째, 청소년 국제교류단체의 자체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고 사후관리의 법제도 확립 필요, 다섯째, 청소년국제교류에 따른 출입국절차 간편화의 필요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장기적 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역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정부차원의 폭넓은 예산지원을 꼽았으며 둘째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 나라간 협정체결 및 양해각서 교환, 셋째, 정부출연기금으로 동북아 청소년 문화 교류재단의 설립, 넷째, 청소년관련법에 ‘동북아 청소년교류활동지원’에 대한 조항의 명시, 다섯째, 청소년 국제교류 단체의 자체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동북아 청소년교류의 장애요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장애요인 및 단기적 해결과제로는 첫째, 청소년교류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재, 둘째, 청소년교류에 대한 이해 부족, 셋째,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는 것과 넷째,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 다섯째, 재정확보의 어려움 등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인 차원으로는 첫째, 청소년교류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부재, 둘째, 청소년교류에 대한 이해의 부족, 셋째, 재정확보의 어려움, 넷째, 국제적 네트워크와 정부차원에서의 정보부족, 다섯째, 정치적 또는 정권교체에 따른 청소년교류 정책의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장애요인 및 장·단기적 해결과제로서 첫째, 청소년교류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담당(전공)자 부족, 둘째, 청소년교류에 대한 인식 및 이해의 부족, 셋째, 열악한 재정, 넷째,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 다섯째,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서 부재 등이 있었다. 민간단체 차원에서 동북아 청소년교류 수행과정에서 장애요인 및 장·단기적인 해결과제로서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첫째, 재정 문제의 열악, 둘째, 국제교류 전문가와 프로그

램의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 셋째, 단체간 수행능력의 큰 편차, 넷째, 일방적인 초청 및 관광중심의 교류활동과 정보의 부재, 다섯째, 지도자 교육의 소홀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동북아 청소년교류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으로는 첫째,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시급, 둘째,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전문가)의 양성, 셋째,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청소년국제교류센터 설립), 넷째, 민간교류단체의 육성과 지원, 다섯째, 재정(기금)조성 방안 연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발전방안 및 정책과제로는 첫째,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전문가)의 양성, 둘째,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 셋째, 재정(기금) 조성 방안 연구, 넷째,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구 시급, 다섯째, 지자체간 국제도시간의 교류활성화 촉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째, 먼저 동북아 지역 발전에 있어 청소년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공동체의식 함양’, ‘타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기회의 제공’,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 형성’ 등을 통해 올바른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한·중·일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교류와 역사교류’, ‘3개국의 청소년들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기획과정에서부터 참여 가능한 형태와 다양한 방법의 교류형태의 도입’, ‘언어적 장애극복을 위한 노력’ 등이 단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동북아 국가간에 효과적인 청소년교류의 영역에 대한 논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부문별 실천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중문화분야의 교류’, ‘민박활동’, ‘청소년지도자 교류’ 등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동북아 국가들 간의 청소년교류를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확립되어야 한다. ‘청소년교류에 대한 정부차원의 폭넓은 예산의 지원’, ‘민간단

체들에 대한 지원 확대’,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청소년 국제교류에 따른 출입국절차의 간편화 필요’, ‘정부출연기금으로 동북아 청소년문화교류재단 설립’등을 제시할 수 있다.

다섯째, 동북아 국가 간 청소년교류의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차원에서 각각 다른 문제점들이 시사되고 있는 바, 다면적인 접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동북아 청소년 교류 증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정책대안을 위한 연구 및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국제교류 활동가의 양성’,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 네트워크 형성’, ‘동북아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시급’, ‘민간교류단체의 육성과 지원’, ‘정기적인 동북아 소식지 발간’, ‘교류에 앞서 해당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임’, ‘동북아 청소년의 타민족에 대한 의식조사’ 등이 있겠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 만 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최 영 표 (동신대 교수)

이 현 영 (건국대 교수)

동북아의 한국, 일본, 중국은 유교 문화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 개인 중심이라기보다는 가족 중심의 유교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의 퇴색 현상도 역설적으로 공통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의 상호 의존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동북아 3국은 침략과 저항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상호 적대적인 민족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각국은 역사적 정체감을 가지며 나름대로의 우월의식, 민족주의, 패권의식 등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교육을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 교류협력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적 긴장과 갈등의 경험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동북아 3국의 교육분야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동북아 지역의 공동의 역사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은 전쟁과 침략, 지배와 저항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동북아 3국은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교류와 협력 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우선 중국과 일본의 교육 문화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국의 교육정책은 각 국가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로 인한 과도한 교육경쟁 또한 유사한 양상이다. 일본은 가장 먼저 산업화를 추진한 결과로 교육에서 후유증이 드러나는데, 이른바 학교붕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기회균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등 그 시대의 요청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올려왔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무너진 상태이다. 지나친 평등주의에 의한 교육의 획일화, 과도한 지식의 주입 등으로 아이들의 개성이나 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이 경시되어 왔다.

중국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교육이 지위상승의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한국과 유사하게 교육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단계부터 개설되어 있는 중점학교 때문에 이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하다. 이들 학교에 다니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상급단계 중점학교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입시위주 교육이 만연되어 있으며 일찍부터 과외를 받는 등 우수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과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과 경제협력이 진전되면서 이에 상응하여 교육 교류협력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협력 실태를 보면 양적인 증기를 보이는 반면 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교류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교육기관 중심의 민간형 교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류협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교류협력은 중국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간 차원의 지인이나 브로커를 통한 교류의 경우도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영속성이 미흡하고 합리적인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교육적으로 효과가 미흡하고 효율적이지 않다. 교류기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기관의 지원도 없어 개별학교가 자체경비로서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데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유학생의 개인차가 심한데 이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제공하는 데 애로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국제교육교류협력정책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일본은 첫째,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 둘째,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일본인 육성, 셋째,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넷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협력, 다섯째, 국제기관을 통한 협력 등으로 체계적으로 국제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과의 교육교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일 양국의 꾸준한 교육교류에도 불구하고 유학에 있어서는 한국 측 수요가 훨씬 많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일본인 유학생 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교류협력은 대부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자매학교를 찾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교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만한 기관이 없다. 대부분 개별적인 지인이나 개인적인 루트를 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의 학교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재정적 지원도 거의 없어 학교 및 학생개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초·중등학교에서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교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게다가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처음부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동북아 3국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협력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 상호 간의 현안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 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일 3국의 교육 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적인 지역 연합으로 인한 공동시장의 추세에 따라 교육협력교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지역 간 공동체형성에 적극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학생과 교원의 인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내년 ‘한·일 우정의 해 2005’를 맞이하여 제 사업이 결실을 맺고, 동북아문

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공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사업의 확대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교육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민간형 전문교육교류단체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단체는 현장의 교육교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교육교류 통계 및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일련의 사업을 벌여 정부와 민간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교육교류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육교류 및 협력을 위한 알차고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 정부주도하(국제진흥원)에 이루어지는 국비장학생들의 교육교류 및 문화교류의 경우는, 경험적인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류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이 방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이 거의 없다. 그렇기에 체계적으로 이들 업무를 전담하고 일선 학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양성과 함께 그들에 의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여섯째, 정부 및 관계기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또한 동북아 교육교류에 필요한 기금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 기 흥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대 관 (경희대 교수)

세계의 사회·정치·문화·경제의 중심이 환태평양에서 미국을 지나 환태평양지역으로 이동하여 21세기에는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이 21세기 가장 역동적인 정치·경제의 중심지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는 자국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와 세계를 염두에 둔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나, 그 동안의 한국의 관광정책은 국내적 안목에만 치중하였다.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은 환태평양 시대의 중요한 문화거점지역이며 한국은 관광중심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요망되고 있다.

관광은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국제교류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구촌 시대 국제협력의 중심개념으로 대두되며, 세계화시대의 가장 특징 있는 현상으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관광협력은 인적·경제적·문화적 교류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협력보다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사람, 상품, 자본, 문화가 상호교환되고 상호의존을 더해 가는 현대국제사회에서 국제교류협력은 그 중요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잡한 국제환경속에서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외국과의 협력관계,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결한 현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적 상호이해의 촉진과 국제적 상호이익의 추구이며, 이를 통하여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 밑받침이 될 수 있다.

국제관광은 경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출산업으로 외화가득률을 통한 수출증대효과, 국제수지 균형효과, 고용증대 효과, 지역산업구조개선효과 등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문화제국주의나 식민지화의 부정적 개념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 등 긍정적인 효과도 언급되고 있다. 물리환경적으로는 환경오염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국제관광에 의해 자연조건과 물리조건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더욱 그 매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광은 여러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관세규제, 출입국절차, 교통·숙박·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같은 관광의 개인적 측면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시장진입과 기업경영 보조금과 같은 관광의 여러 측면들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국가간 관광협력은 근본적으로 회원국간의 다양한 국가수준과 문화차이에 따라 공동의 협력주체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협력의 내용이 단순하고 비경제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실효성이 부족하고 협력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도도 미진한 경우가 많다. 특히 관광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기타의 측면에 대한 협력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지방자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측면을 중앙정부차원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국제 관광객 수는 전 세계적으로 총 7억 260만 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여 2001년 SARS, 이라크 전쟁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관광교류가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실질적인 관광 증가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5.1%) 지역이며, 국제관광의 주요 송출지역(18.7%)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995~2002년 동안 세계 관광시장 성장률인 4.1%를 능가하는 6.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시장 점유율 또한 2010년 19.40%, 2020년 25.44%로 전망되어 향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주요 국제관광시장으로 부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아 국가 간 관광교류 협력의 현황 및 전망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대 한국 관광 교류에 의하면, 중국인 방한객은 1992년 8월 국교수립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 이후 중국인의 방한객 수는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증가분의 대부분이 기존 단기상용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관광목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방문 중국인 증대를 위해서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테마파크, 카지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중한 분석에 따른 전략수립이 요구되며,

방한 중국인들의 한국방문 제고를 위해서 숙박과 음식 등 국내태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일본의 대 한국 관광교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인 방한객 증가는 한국이 일본인들에게 국내여행을 대체하는 단기해외여행지로서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한·일노선의 정체와 내국인 출국 급증으로 인한 좌석확보 곤란은 방한 일본인 유치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중·일 3국 관광 공사는 2004년 4월 3개국 연계 여행상품 개발을 위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주요 여행업체 11개사를 대상으로 3개국, 13박 14일 팸투어를 실시하였다. 한국은 한·중·일 3국간 Long Distance Markets 공동증진을 위한 민간부문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2005년 한·일 공동방문의 해에서 양국간 다양한 문화교류, 둘째, 한·중·일 3국의 NTO의 공동 홍보활동, 3국을 하나의 브랜드로 패키지 상품화하여 공동 마케팅을 펼칠 것을 제안하였다. 중국은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팸투어 실시, 대형 이벤트 홍보 및 촉진을 위한 협력과 관광 가이드와 해설사 프로그램과 어학 훈련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관광을 ‘일본산업’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진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1998년부터 8%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꾸준한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2000년에는 14.2%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1년을 제외하고는 2003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한국은 일, 중, 러 등 세계적인 대국의 연계 중심에 입지한 점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동북아 관광교류의 허브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과 궁궐, 사찰, 전통음식 등 한국고유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 및 역사유적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생활문화자원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소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의 양적부족·다양성 부족·지역편중으로 관광객 불편 및 고비용 구조의 심화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인력 교육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육프로그램과 현장연계 교육부족으로 현장실무 능력과 전문성이 미약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 또한 부

축한 상황이기도 하다. 관광산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각종 규제와 일관성 없는 정책 지원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신규투자 촉진과 경영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 불안정 요인과 관광 유인력 약화로 외래 관광객 유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반면에 해외관광환경 조성의 활성화로 국민관광객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주 5일 근무제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국민관광수요가 급증·다변화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관심과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로 지역관광개발이 급증 추세에 있다. 더불어 남북 관광교류협력 확대로 한반도 국제 관광여건의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 하나이나 관광산업은 매우 늦게 시작되었고 상당한 발전에 들어서게 된 시기는 개혁개방 이후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중국의 입국 숙박 관광객 수는 세계 제 5위이고 외화수입도 5위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관광대국 1위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관광 산업 규모의 고속 확대와 국제지위의 향상과 국제협약의 활약에 힘입어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교량으로 삼고 있다. 중국관광은 관광 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높은 의지, 관광자원의 보호정책, 이미지선전의 강화, 관광정보의 네트워크 구축의 적극적 추진, 정보화와 네트워크 건설, 중국관광의 표준화 작업, 관광안전관리의 강화와 인식지도 강화, WTO 가입 시의 약속에 대한 실현 촉진, 관광 법제의 강화를 통해 미래를 위해 도전함으로써 중국관광산업을 21세기의 신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3%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제불황으로 출국자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글로벌 관광전략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서의 관광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신규고용과, 지역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이미지를 만들고, 중·일, 한·일 양국들과의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Visit Japan Campaign, New Welcome Plan 등의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북아 3국의 사례를 기초로 동북아 국제 관광교류협력의 결과요인을 살펴보면, 구성요인은 협력주체, 협력대상, 협력내용으로 이루어지며, 환경요인은 장애환경과 촉진환경, 구체적인 사업선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이루어지고 결과요인은 협력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로 이루어진다. 첫째, 관광교류 협력을 위한 잠재분야의 검토를 통해 동북아 인적 관광교류 촉진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역내 무사증 제도를 도입하고, 동북아 관광패스를 개발하며, 동북아 관광협력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적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 확대를 위해 한·중·일 문화관광교류전의 순환개최와 동북아 관광기업인 정례총회 개최, 동북아 방문의 해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관광자원의 가치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 아시아 관광연구 센터를 설립하고, 녹색관광모델개발 및 네트워크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동북아 문화의 연계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연계체험 관광 상품 개발과 동북아 관광홍보 및 관광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동북아 관광안내 홍보물 발간 및 배포, 한·중·일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관광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기반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제시된 다양한 사업이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추진조직 및 인력구성, 재원조달 및 예산확보, 단계별 투자계획,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관광은 방문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훌륭한 수단이 되는 만큼 방문지역의 주민도 국제관광객을 통해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결국 국제관광은 인적 교류차원에서 단순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닌 문화와 문화의 접촉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관광 교류에 의한 상호 교환적 문화이해는 국가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간 관광교류 협력은 상호간의 노력을 유도하고 촉진할 수 있는 기본적 원칙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국의 동의와 사전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동북아 관광교류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성과는 윈-윈(win-win) 차원에서 기대되는 구체적 효과로 예상되어야 하며, 현실적 장애요인의 검토분석을 통해 해소·최소화 가능성 방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장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인식의 모색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차별성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실 외	공저	5,000원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외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